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구조: 마르크스경제학적 시각⁽¹⁾

정 성 진

이 글에서 필자는 1997년 경제위기 후 한국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그 이론적 정치적 함의를 논의한다.

1997년 경제위기와 이후 전개과정은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공황론의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다. Piketty의 ‘자본주의의 제1의 기본법칙’, 즉 $\alpha = r * \beta$ 이 $\beta (= K/Y, \text{자본산출비율})$ 의 증가가 $\alpha (= P/Y, \text{이윤몫})$ 의 증가, 즉 불평등의 심화를 결과시키는 것을 보이는 법칙이라면,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법칙은 $r = \alpha/\beta$ 에서 $\beta (= K/Y, \text{자본산출비율})$ 의 증가가 $r (= P/K, \text{이윤율})$ 의 저하를 초래하는 관계이다.

그 동안 한국의 마르크스 비율 연구에서 확인된 ‘정형화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7년 경제위기 전 이윤율(P/K)의 장기 저하. 이윤율 저하는 ‘산출자본비율’(Y/K)의 저하, 즉 Piketty의 $\beta (= K/Y, \text{‘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대응변수})$ 의 상승에 주로 기인했다. 따라서 1997년 경제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나 ‘지연된 파국’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공황이었다. 1997년 경제위기 후 자본의 이윤율이 회복되었는데, 이는 주로 $\alpha (= P/Y, \text{이윤몫, 즉 착취율})$ 의 상승에 기인했다. 이와 같은 노동 착취 증대를 통한 자본의 수익성 회복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다. 그리고 1970년대(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은 분배를 동반한 성장이 아니라 초과착취에 기초한 성장이었다.

개혁주의 경제학자들은 1997년 경제위기 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흔히 금융화

(1) 본고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2014년 12월 16일 개최한 학술대회, 21세기 한국자본주의의 대는 쟁에서 발표된 내용의 요약이다.

(financialization)로 묘사한다. 하지만 금융화 관련 지표들, 예컨대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위, 은행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우위, 주주자본주의 논리의 지배, 기업 자금조달에서 직접금융 비중의 증가, 비금융법인 채무 비율의 증가, 이른바 ‘금융화로 인한 투자 둔화’ 등은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997년 경제위기 후 한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의 주요양상은 금융화라기보다, 실물 부문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심화이다. 광공업 부문 CR3는 2002년 47.6%에서 2009년 55.4%로 증가했다. 하지만 자본의 집적 집중은 1980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에서 PD(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가 주장했듯이 단선적인 ‘독점 강화’가 아니라, 경쟁 격화, ‘독점 강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 후 이윤을 회복 과정에서 세계화, 즉 한국의 세계시장 편입과 한국자본의 세계시장 진출이 유례없이 심화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세계화는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 위기 이후 위기의 돌파 전략으로서 자본과 국가에 의해 강행 추진되었다. 예컨대 2007~9년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DHL 세계화 연결지수’가 감소했으나, 한국은 도리어 59에서 64로 증가했다.

1997년 경제위기 후 세계화가 가속되고 자본수출이 급증하면서 한국자본주의는 ‘아류제국주의’(sub-imperialism)로 전화했다. FDI(해외직접투자)는 1990년 10.7억 달러에서 1996년 45.3억 달러로 증가 후 2004년부터 급증하여, 2011년 255.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이후 FDI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초과하여 한국은 순자본수출국으로 전화했다. 한국의 FDI 스톡이 세계 FDI 전체 스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1%에서 2011년 0.8%로 증가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자본 ‘축적의 새로운 원천’(Rosa Luxemburg)으로서 해외 자원개발과 저임금 이주노동 착취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인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중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소비지출 비율이 증가한 반면, 같은 시기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인 한국, 독일, 스웨덴에서 이 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이른바 ‘임금주도 경제성장’ 혹은 ‘분배에 기초한 성장’이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 관철되면서 노동자계급의 비중의 지속적 증대(1995년 51.1%에서 2010년 56.1%로 증가)와 구중간계급의 몰락(농민층 양극분화 포함)을 핵심으로 한 양극화된 자본주의 계급구조가 고

착화되었다.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자계급 안녕’ 테제는 한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990년대 이후 신중간계급의 지위 상승과 함께 노동자계급 내부 분화도 두드러졌다. 특히 노동자계급에서 사무직 화이트칼라 분파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반면, 단순노무 비숙련 노동자층의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의 관철, 공황과 양극화,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의 고착화의 현실은 개혁주의의 한계와 마르크스주의 반자본주의 정치의 현재성을 지시한다. 1980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에서 NL(식민지반봉건사회론), PD(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는 상호대립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특정 유형이나 단계, 후진성, 종속성, 주변부성, 파행성 등에서 찾았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무효화되었다. 1980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에서 NL과 PD가 공유했던 스탈린주의 파국론은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의 문제설정과 무관하다. 반면, 최근 개혁주의는 NL, PD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의 위기와 양극화의 원인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심층’(자본 vs. 노동의 계급모순)이 아니라, ‘시장 vs 국가의 대립’, 자본주의의 특정 유형(신자유주의)이나, 유통의 ‘표면’(금융화, 불평등(‘1% vs. 99%’))에서 찾는다. 개혁주의는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진보적 자유주의’) vs 사회적 대타협(‘발전주의 복지국가론’) 등으로 대립하면서도, 모두 대안을 자본주의 틀 안(‘자본주의의 다양성’)에서 구한다.

자본주의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대타협의 근본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분배에 기초한 성장’(‘임금주도 성장’) 등은 ‘최대강령’으로서, 즉 궁극적 목표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반자본주의 정치, 즉 ‘이행기강령’의 관점에서 ‘비개혁주의적 개혁’(non-reformist reform) 요구의 일부로 위치지어져야 할 것이다.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전화: 055-772-1224

E-mail: seongjin@gnu.ac.kr

